

안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8-773
----------	-------

제안년월일 : 2021. 12. 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 위반자의 문책 및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예산수반사항 :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 붙임 3

6. 참고사항 : 붙임 4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표준안)〈행정안전부〉
- 「안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안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안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안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